

# 새 정부 출범과 충남도의 발전과제

정연정 |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I. 머리말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지역발전을 국가발전의 모티브(motive)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생산력의 기초단위로서 지역을 재 정의하고, 국가통합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을 저발전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심각한 격차(divide)는 진정한 지방화와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하게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나 분권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 및 집중현상을 극복하고, 국가의 다양한 자본과 자원의 분산을 통해 다양한 발전 원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광역화, 그리고 세계화 등 일련의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모델(role model)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김선기, 2005; 금창호, 2005; 육동일, 2005). 참여정부의 지방발전의 핵심내용이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최소화하고, 국가자원을 지역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은 기업들이 지역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경제 및 기타 사회행정을 움직이는 정부기관이 이동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기업포함)들이 함께 이동하여 지방의 발전자원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반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기업 스스로가 생산자원 및 인프라를 지역에서 생성토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는 것

은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공히 다른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지방발전의 중요한 근간을 마련했고, 또 마련해나갈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업과 지방발전을 연계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의 정책기조는 자칫 열악한 우리의 지역을 단순한 시장논리에 의존토록 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을 제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수도론’ 역시 시장 원칙에 근거한 지역발전이 갖는 제한성으로 인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근 하이닉스 공장증설이 청주지역으로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이는 다양한 지역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엄태석, 2007:p.49). 따라서 현재 충남도는 참여정부의 분권 패러다임에 입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새 정부의 지방으로의 기업 및 자본유입을 위한 지역발전 구상이 중첩되는 복합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궁극적으로는 자치발전에 얼마만큼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충남도 스스로가 자원 환경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전략정비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분권사업들을 지역 내의 경제성장과 연동하는 전략,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광역거점중심의 경제발전의 기본적 구상들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적용하는 전략이 다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발전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새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 충남도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경제발전 정책의 내용을 개괄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발전 방향과 과제들이 제시된다.

## II. 새정부의 지방발전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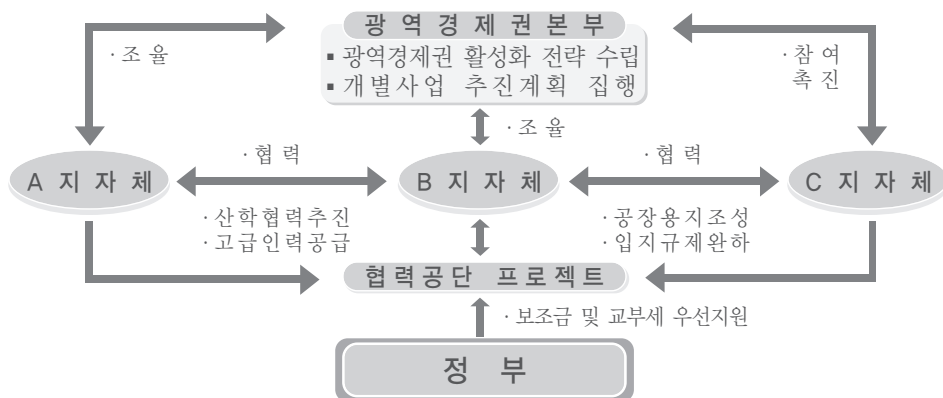
### 1. 5+2 광역경제권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의 핵심지표를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건설,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총 21개 전략을 수립하고, 192개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적 실용주의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설정하고, 자유로운 시

장과 슬림한 정부를 주요한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8). 이러한 새 정부의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원리는 공공기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운영의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총 192개 국정 과제 중에서 지역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과제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과학 비즈니스 벨트(Business Belt) 조성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전체를 광역권으로 재분류하고, 관련 권역 내에 필요한 산업 및 과학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지역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등 5개의 경제권과 강원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2개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경제발전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다. 지방을 인구 규모 500만명을 기준으로 총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각종 규제 장치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관련 광역권에 진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이와 같은 구상은 국가전체의 발전 원동력의 격차조정보다는 개별 권역들의 경제적 특성화는 물론 권역내의 경제적 상생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새 정부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권역별 경제발전 전략을 특성적으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상생 및 공동노력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구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광역적 연계사업 활성화, 분권, 통합적 행정 및 재정제도 구축, 수도권·지방 공동발전 등의 주요 전략들에 의해 도출되어진 것이 바로 ‘5+2’ 구상인 것이다.



〈그림 1〉 새정부 광역경제권 구상 개념도

위의 <그림 1>에 따르면 '5+2' 광역경제권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특히 중앙정부는 관련 발전 보조금 및 교부세를 지원하며, 입지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공장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역별 구상 내에는 필요한 지역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역내 자치단체들은 필요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본이나 기업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주로 지역의 교육 및 인력 인프라를 통해 기업에게 다양한 유인요인을 제공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관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특정지역을 규제의 대상으로 정의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하에서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들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의 구상은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요소가 수도권 규제를 전제로 한 지역의 발전인데 반해, 새 정부는 전체 지방을 권역별로 동등하게 구분하고, 필요한 규제도 동일하게 완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역의 상생발전과 접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과밀화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즉 자본유치,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간의 시장경쟁은 결국 기존의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표1>참조).

<표 1> 수도권 집중현상(2005년말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인 구 주 택	면적(km <sup>2</sup> )	99,646	11,730 (11.8)
	인구(천명)	49,268	23,782 (48.3)
	인구밀도(인/km <sup>2</sup> )	494	2,027
	주택보급률(%)	102.2	93.9
지 역 경 제	지역총생산액(십억원)	787,796	375,875 (47.7)
	제조업체(개소)	113,310	64,124 (56.6)
	서비스업체(개소)	759,591	365,029 (48.1)
	금융예금(십억원)	561,946	381,040 (67.8)

	구분	전국	수도권(%)
기 능	금융대출(십억원)	613,922	409,655 (66.7)
	4년제 대학수	173	68 (39.3)
	공공기관(개소)	403	344 (85.4)
	의료기관(개소)	45,772	23,079 ((50.4)
	자동차(천대)	15,397	7,114 (46.2)

자료 : 건설교통부, 2006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새 정부 광역경제권 구상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지역간의 상생 협력에 의한 소지역 또는 저발전 지역의 소외현상이다. ‘5+2’ 광역경제권의 의미는 국토 전체의 경제권을 나누는데 있어 시·도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화 경제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개념과 연관된 것이지만 광역경제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지역들의 경제적 저발전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광역 경제권내에 다양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으로 관여할 것인가, 그리고 권역내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기초단위의 지역경제로 흡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내용이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생활거주지 중심의 소지역 활성화라고 한다면,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오히려 주민의 생활거점을 특정한 지역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거대 도시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별 중소도시(인구 5~30만)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19.4%, 미국 40.4%, 일본 24.4%, 영국 41.7%, 독일 53.5%, 프랑스 53.81%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도시의 수가 매우 현격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김두환, 2007:p.30). 따라서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역 내의 소지역들의 저발전 및 인구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 내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물론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향후 지역발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간의 상생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들 간의 산업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투자의 지역 간 산업간 상호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수도권 지방간 파급효과가 큰 업종들이 지역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은 중요한 발전 자원들을 개발하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인력교환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역과 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완화의 환경은 이제까지 지역의 주요한 산업 및 공업용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및 경제발전 설계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구조 조정 및 관련 기업유치 과정에 지역의 관여와 의사결정 권한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기회요인을 제공할 수 있기도 하다.

## 2. 충청남도 지역발전 현안

충남도는 민선 4기에 접어들어 강한 충남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특히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 및 기업유치 활동을 추구해왔다. 2007년 충남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방대학 논산유치,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 유치 등 거대한 현안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고, 특히 외자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해외 자본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해왔다(대전일보, 2008.02.08일자). 현재로서 충남도는 새로운 정부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거점도시적 역량과 자원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변되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과거의 분권정책과 현재의 광역 거점도시로서의 복합적 과제들이 충남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다양한 물류유통의 중요한 거점으로 역할을 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된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구상들이 실제로 실현되며, 충남도는 명실공히 산업과 행정, 과학의 집적지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이외에도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충남도 지역발전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는 경제발전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지역의 총생산과 산업생산 및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도의 외연적 성장의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성장은 내적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물가상승률의 증가 및 어음부도율의 상승으로 인해 충남내의 중소 토착기업들의 자기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천안·아산을 비롯한 서북부 지방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여타 지역은 더욱 더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박종찬, 2007:pp.29-30).

이러한 경제발전의 지역 내 격차현상이 심화된다면,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다양한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들이 지역 내에서 골고루 배분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충남도의 경제 및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한 현안은 신 정부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지역 내 격차를 최대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재구성하는 가하는 것이다. 즉 새 정부 하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규제완화가 실제로 다양한 자본과 기업을 지역으로 유인하는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규제완화의 중요한 효과들이 충남도 전역에 골고루 확산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충남도내 지역이 오히려 정책 혜택의 주요한 대상이 될 뿐, 상대적으로 발전 동인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들은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거의 향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거점에 근거한 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발전 전략은 실제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분야, 즉 정보통신, 바이오 등과 연관된 사업 분야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정의되는 충청지역의 바이오 산업단지 활성화 전략은 실제로 현재 충남도의 산업구조에는 부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충남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로 광업 및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 중 41.8%에 해당하고, 서비스 및 기타 사업은 49.5%로 나타나고 있다(박종찬, 2007:p.33).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 하에서 이러한 산업구조가 단기간 내에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절한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기업과 자본이 이 지역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매력적 유인요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얼마만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충남도의 제조업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도 실제로는 충남도 스스로가 제조업 기반을 확충해 온 것도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충남도가 다양한 공장건설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이루어질 규제완화는 이러한 상대적 이점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도는 자율적인 시장에 조응하기 위한 자생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는 고용환경의 개선으로 연계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충남도의 경우는 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박종찬, 2007:p.37). 이러한 인력부족은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인력난은 새 정부 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광역거점 산업 발전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극복될 가능성도 높지만, 현재 충남도의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동력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는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대졸출신자들의 숫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기업들이 유치되는 형태로 경제발전 전략이 진전되면 이러한 고학력 대졸출신 인력들의 고용은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특수한 교육을 받은 외부 인력들이 한꺼번에 유입됨으로써 고용갈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내 인력을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에 적합한 인력으로 전환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에서의 외부 노동인력과 내부 노동인력간의 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 Ⅲ. 충청남도의 발전 과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충남도는 새로운 정부의 '5+2' 광역거점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전의 모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몇 가지 지역발전의 현안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지역 업그레이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로서 몇 가지 발전과제들이 제시된다.

우선,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수도권의 규제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적절한 공장부지와 토지 활용이 용이하게 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것은 수도권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공히 이루어지는 경쟁중심의 시장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충남도에 유입되는 자본과 기업의 매력적 요인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통해 오히려 주변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실제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주도하고 표출하는 허브(herb)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의 매력은 이러한 낮은 토지가격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업과 자본이 이탈(exit)하지 않는 상대적 우위 항목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연동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는 수도권을 견제하기 위한 비수도권 지역간의 주요한 협력 체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조건과 제도 창출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내부의 격차를 조정하는 과제가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내에 포함되는 지역과 배제되는 지역간의 차이와 격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광역거점 경제권 구상 내에 효과적인 지역 내 경제적 협력체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내부의 발전지역과 저발전 지역의 차이가 새 정부에 들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적인 발전과제를 구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낙후된 내포 문화권 중심의 지역에 대해서는 '장항산단사업'이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지역의 낙후한 지역의 생산과 고용조건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국책 경제 사업들을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충남의 낙후한 지역에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여,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 및 개발 전략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새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내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과제들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영상미디어, 동물자원 바이오 4대 산업 전략을 육성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지역의 전략산업은 새 정부의 주요한 광역거점 사업들과 연계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고용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전략과 도 차원의 고용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대학의 육성이 새로운 정부의 산업 전략을 통해 재조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고급인력을 지역 스스로가 충원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 정부의 경제 전략과 연동되는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고용주체와 교육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5~10명 단위의 소기업 인력고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과제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즉 지역의 여성, 고연령층의 인구들을 직업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산업구조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상되고 있는 ‘5+2’ 광역거점 산업전략과 효과적으로 연동되는 충남도의 새로운 경제발전 및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현안과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충남도의 중요한 발전과제는 기존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과 새 정부의 광역거점 산업전략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자본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복합적으로 남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필요한 지역 인프라 개선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동등하게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제도정비, 인력 및 고용조건 개선과제, 그리고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의와 조정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강한 충남’은 내적으로는 지역 내 발생가능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방발전의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충남도 발전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선기, 2005, “지역간 협력 및 상생발전 실태”, 열린충남, 가을호, 충남발전연구원
2. 금창호, 2005,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모델 개발 및 활용”, 2005년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세미나 자료, 시도연구원협의회
3. 박종찬, 2007, “충청남도 업그레이드 방향과 전략: 경제부문”, 「충청남도 업그레이드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
4. 엄태석, 2007, “국가균형발전과 대수도론”, 아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5. 육동일, 2005, “충남과 주변 자치단체간 상생발전 방안”, 열린충남, 가을호, 충남발전연구원
6. “이명박 정부 지방정책과 과제: 광역경제권 구상”, 연합뉴스, 2008.02.21일자
7. “충남도의 발전 비전과 전략”, 대전일보, 2008.02.05일자